

국민의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국회 개헌안 표결 불발

개헌안, 5·18 정신 헌법전문 등 담겨
국힘 “찬성하지만 지선 전은 졸속”
민주당, 추가 본회의 가능성 시사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에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개헌 추진은 정략적이라는 입장을 내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헌안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의 의원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만 투표에 참여했고, 개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되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표결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이미 12·3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과거의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넘어간다면,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 왜 그때 고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나. 민주화 운동의 전문 수록과 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의제들이다. 더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특검도 밀어붙여 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달라”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할 경우, 이튿날인 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與 특검법 맹공한 국민의힘 “대통령 범죄 지우기”

靑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반발하며 원천 무효 주장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도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불법 대복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그러나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했다.

송연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 5년 입기 후에 반드시 재판받겠다. 대통령 입기 중에 공소 취소라든지 본인의 죄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춰서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삶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바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의 죄를 없애려는 무지막지한 ‘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아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를 것이다.’ 이런 오만하고 나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추경 집행률 47% 중기 지원도 본격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지급

정부가 7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7%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4조8000억원 중 약 80%인 3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과 테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예산처에서 추경 집행 상황을 보고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신속 집행 10조5000억원 중 5조 원을 집행해 약 47%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고에서 나간 것이 3조8000억원이어서 약 80%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안 간사는 “원래 추경이 확정돼야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성립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안 간사는 “수출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2079개사에 849억 원을 지원하는 선정 절차가 완성됐다”며 “어제부로 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604억원, 도합 1898억원이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됐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정청래 “여러분 승리가李 정부 성공”

與, 고양서 공천자대회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의 승리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은 340여명 후보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는 이번 6·3 지선을 승리로 이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온 국민이 빛과 혁명을 통해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

다”며 “윤여계인 공천을 통해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진숙이 웬 말이고 추경호가 웬 말인가, 그리고 정진석은 또 웬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경기도지사 추미애·제주도지사 위성곤·인천시장 박찬대 등 후보를 비롯해 인천 계양을 김남준·연수갑 송영길 후보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여러분이 그 길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인천제주 공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